

# 국내 대체투자 연평균 17.4%씩 증가

국내 현황 · 시사점 보고서  
2015년말 기준 260조 규모  
“저금리·고령화로 증가세  
민간투자사업·부동산간  
접투자 비중 국내 약 70%  
투자처 부족 해외투자 확대  
리스크 높은 투자 우려”

저금리·고령화로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 이장욱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과장과 정상범 비은행분석팀 조사역은 “BOK 이슈노트- 국내 대체투자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국내 대체투자 규모가 2015년 말 기준 260조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6년 말(61조4000억원)에 비해 4.2배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17.4%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16.7%로 10.6%포인트 늘었고, 금융기관들의 총 금융자산 대비 비중도 3.9%로 2.0%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추구성향 강화, 고령화로 인한 장기투자 수요 등으로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이 아닌 여타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투자대상은 민간투자사업 및 부동산 간접투자 비중이 전체 국내 대체투자의 약 70%에 달했다. 민간투자사업(39.5%)이 가장 높았고, 부동산펀드·리츠 등 부동산간접투자(29.8%), 특별자산펀드(15.4%), PEF(14.3%), 헤지펀드(1.2%) 순이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갤럭시 노트7의 펜 기능 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에 참석 한 참석자들이 그림 그리는 로봇이 갤럭시 노트7의 펜 기능을 소개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간접투자는 높은 증가세,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등으로 증가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자산펀드 및 PEF의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다.  
주요 투자처는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등으로 나타났다. 연기금(36.0%)이 국내 대체투자 투자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보사(24.6%), 자산운용사(18.7%), 손보사(12.8%), 은행(6.1%), 증권사(1.8%) 순이다.  
이중 기관투자자들은 고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하고, 자산 가치 변동이 크지 않은 부동산과 민간투자사업에 주로 투자했다. 보험사와 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형태의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출자형태의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투자지역을 보면 국내 투자비중이 대체로 높고,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다만 최근 국내 대체투자 대상 부족 등으로 해외 대체투자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북미지역 투자 비중이 35.4%로 가장 높고 유럽(16.3%), 아시아(15.3%) 순이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 대체투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그림자금융” 역할로 국내 산업생산유발에 기여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운용 다양화를 통해 국내 금융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민간투자사업의 국내 산업생산 및 취업유발 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6조8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4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익

률이 공실을 상충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투자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대체투자는 대출형태의 투자비중이 높고 폐쇄형 펀드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다만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어렵고 주요 투자대상인 오피스 빌딩의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해외 대체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대체투자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 유의하면서 투자대상 다변화, 투자자 및 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시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부동산 못 믿어”... 가계, 금융자산 증가

LG경제연구원, 현금·연금·보험 비중 ↑... 안전자산 선호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은 2008년 말 70.5%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63.1%까지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낮아진데다 부동산 수매임도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2008년 말 29.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6.9%를 차지했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주식과 채권, 간접투자 같은 투자자산은 줄어들고 보험이나, 연금 등 안전자산 비중이 늘었다. 현금 비중도 증가했다.  
투자자산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07년까지 34.1%로 고점을 찍은 뒤 2015년 25%까지 낮아졌다. 주식 및 간접투자 비중은 2002년 19.0%에서 2007년 31.1%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

19.4%로 줄었다.  
이는 추가 약세와 관련이 크다. 2011년 주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이후 대내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정체상태다.  
때문에 안전자산 비중이 증가했다. 안전자산의 경우 2007년 65.2%로 저점을 기록한 뒤 2015년 74.2%까지 상승했다.  
2002년 21.4%였던 보험 및 연금 비중은 2015년 31.1%로 증가했다. 2007년 42.5%였던 현금 및 예금 비중도 43.1%로 늘어났다. /뉴시스

## 간편심사보험 가입 유도 ‘꼼수’

유병자들 보험으로 일반보험 대비 최대 2배 높아

보험사들이 영업실적을 쌓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도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보험상품 감리를 통해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확인,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 축소, 일부 질병에 대한 인심사생략 및 가입연령을 확대한 대신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2배 비싸다. 또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도 제한돼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건강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일반 상품이 아닌 간편심사보험 상품에 가입시켰다. 이미 일반심사보험에 가입된 건강한 피보험자에게도 신상품 출시 캠페인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한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확인된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비롯해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메타라이프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등으로 20곳(46개 상품)에 달했다.  
더욱이 이들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려고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비교·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밖에 청약서상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보험사도 16곳 확인됐다. /뉴시스

## “금감원 해외사무소 부실 운영”

박용진 “8개 도시 18명 파견 예산 70억... 정보 부실”

연간 70억원이 나가는 금융감독원의 해외사무소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은 뉴욕(3명), 워싱턴(2명), 런던(3명), 프랑크푸르트(1명), 도쿄(3명), 하노이(1명), 베이징(3명), 홍콩(2명) 등 세계 8개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18명의 해외 주재원을 파견했다.  
이들 사무소에는 주재원 외에 현지에서 고용한 사무원이 1~2명씩 배치돼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해외 주재원 18명은 작년 459건의 보고서를 금감원 본부에 보내왔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매월 두 건 꼴로 보고서를 보낸 셈이다.  
주재원이 3명 있는 뉴욕사무소는 작년에 35건의 보고서를 보냈다. 주재원 한 명이 한 달에 한 건의 보고서를 썼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일부 다른 사무소도 보고건수는 많았지만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정리해 ‘면피성’으로 보내온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작년 한 해 동안 해외 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69억3000만원을 썼다.  
주재원과 동반 거주하는 자녀들을 위해선 매월 프랑스는 1456유로(180만원), 일본은 7만1500엔(81만원), 베이징은 1만1천원(167만원)까지 학비가 지원됐다.  
금감원은 또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주재원 자녀가 사립학교에 들어갈 경우 학비의 50% 선에서 최대 월 600달러(66만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1인당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해외에 파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본국에 보내온 정보가 양과 질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며 “일부 사무소의 경우 현지 뉴스를 끊어 보내는 수준이어서 엄정한 업무 평가 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수준이 높은 미국과 영국에서 ‘귀족 학교’인 사립학교 학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학산업과  
063-430-2951